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 사직 확산…위기감 '최고조'

전대 92명·조대 52명…오늘 대학에 일괄 제출 예정

정신 전남대병원장, '필수의료 유지' 호소문 발송

의대 증원에 반발, 의대 교수들까지도 집단 사직에 돌입하는 등 의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중증환자 병동으로 들어가는 모습. /김영근 기자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 간 대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확산하고 있어 지역 의료현장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8일 전남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전날까지 비대위에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는 총정원 283명 중 92명이다.

전날에만 본원이 있는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21명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냈고, 화순 전남대병원에서는 15명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비대위는 의대 교수 2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참여한 257명(94%) 중 215명(83.7%)이 자발적 사직서 제출에 찬성한 만큼 사직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29일까지 교수들의 사직서를 취합해 의대 측에 제출할 방침이다.

조선대는 의대 교수 161명 가운데 52명이 사직서를 냈다.

조선대 의대 비대위도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129명(78%)이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동의했다.

양 대학 의대 교수들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교수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근무 시간 준수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조선대병원 한 의사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 달을 훌쩍 넘기면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교수들의 피로도가 극심해지고 있다"며 "체력 한계 때문이라도 근무 시간 축소 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전남대병원 한 입원환자 보호자는 "신장 질환으로 남편이 입원했는데, 최근 하루하루가 매우 불안하다"며 "교수들이 사직하면 진료를 못 받거나, 받더라도 미뤄지는 것 아니냐"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이날 오전 본·분원 소속 350명 임상교수 이상 교수들에게 개별적으로 호소문을 발송했다.

정 원장은 "비상 진료 상황에서 갈수록 누적되는 교수들의 피로도 증가와 의대 비대위의 결정으로 일부 과에서 외래, 응급 진료 범위에 대해 (축소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병원은 광주·전남 환자들의 최후의 보루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진료를) 유지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과의 상황으로 진료 기능을 축소할 계획이 있으면, 미리 진료 부문(진료처)과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수희 기자

현장 검증 마친 '장애인 이동권' 소송 재개

법원, 광주 장차연 등 원고 측에 '필요 노선' 요청…다음 재판 5월23일

'시외 고속버스 내 휠체어 탑승 장비 미설치는 차별'이라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 등이 제기한 구제 소송의 현장 점검을 마친 법원이 재판을 재개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8일 장차연 소속 회원 등 5명이 국가와 광주시, 금호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소송의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장차연 소속 회원 등 5명이 지난 2017년 12월 장애인들도 시외 고속버스를 탈 수 있도록 금호고속 전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 설치와 함께 차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다른 원고들이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어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했다.

이후 2022년 2월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을 하면서 같은 해 11월 광주지법에서의 재판도 재개됐다.

원고와 피고 간 공방이 이어지던 중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9일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실제 장애인들의 시외버스 이용 여건 등을 살피는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현장 검증 후 처음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에 거주지, 학교 또는 직장 등 상황을 고려해 주로 사용할 노선을 다음 재판까지 밝혀 달라고 했다.

이는 주위적 청구 취지인 '전체 노선' 대신 예비적으로라도 원고들이 실제 이용하기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필요한 노선을 추려보기 위함인데, 앞서 대법원은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나 운수회사 재정·정부 지원 한계 등을 고려해 장애인이 탈 만한 버스에 단계적으로 탑승 설비를 설치하도록 시기·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호고속 측엔 필요 노선이 추려지면, 이를 언제쯤 이행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국가·지자체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등을 두루 살피겠다고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23일 재개된다. /안재영 기자

광주 도심서 포르쉐 인도로 돌진…운전자 잠적

광주 도심에서 단독 사고를 낸 외제 고급 스포츠카가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운전자 추적에 나섰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편도 3차선 도로와 인도 사이에 포르쉐가 버려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해당 차량은 한쪽이 인도에 반쯤 걸쳐진 채 운전석 쪽 문이 열린 상태였고 에어백도 터져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에는 이미 운전자가 현장을 뜬 뒤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전봇대를 경미하게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차량 안에 두고 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차주로 추정되는 A(30대)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차주 A씨가 단독 사고를 낼 당시 운전자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운전자가 파악되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다. 음주운전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안재영 기자

'졸음 운전' 차량 전복…4명 경상

해남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운전자의 '졸음 운전'으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탑승객 모두 크게 다치진 않았다.

28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분께 해남군 옥천면의 한 교차로에 차량이 전복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자력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1명을 구조한 뒤 전체 탑승객 4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4명 모두 크게 다치진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전복 사고는 운전자 A(60대)씨가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인근 시설물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뒤집힌 것으로 파악됐다. /안재영 기자

5·18 공로자회 내일 회장 등 보궐선거

찬반투표 총 4명 선출…같은 날 예정 부상자회는 내달로 연기

해임된 정성국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이하 공로자회) 회장과 임원 등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한 보궐선거가 이번 주말 치러진다.

28일 공로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에서 제3대 회장과 이사 1명, 감사 2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한다.

직위별 입후보자는 회장 윤남식(71)씨, 이사 이흥철(62)씨, 감사 김경오(65)·이강현(70)씨로, 경선의 소지가 없어 찬반 투표 형식으로 진행된다.

유권자는 대의원 61명(광주 18명·전남 13명·서울 13명·경기 13명·부산 4명)과 임원 11명(부회장 2명·이사 9명) 등 총 72명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1월13일 제1차 임시중앙총회에서 정성국 회장과 임원 3명의 불신임안이 가결된 이후 공석이었던 자리들을 메꾸기 위해 진행된다.

당시 정 회장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로자회 이름으로 단독 행동을 하는 등 '직권남용' 사유로 총회에 회부됐다.

공로자회는 선거가 끝나는 데로 집계를 시작, 당일에 당선 공고를 낼 계획이다.

신규 선출된 회장 등의 임기는 정성국 회장 등이 채우지 못한 나머지 3년이다.

한편 공로자회와 마찬가지로 회장 등이 공석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도 같은 날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징계 대상자 10명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논의가 진행 중이라 다음 달 20일께로 연기했다. /주성학 기자

ID·전화번호 바꾸며 중고거래 사기

나주경찰서는 28일 중고 물품 거래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A(2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달가량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총 12차례 사기 행각을 벌여 총 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여 중간에서 물품과 돈을 각각 받아 챙기는 이른바 '3자 사기' 수법을 썼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며 범행을 이어가고자 중고장터 계정(ID)과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꾸기도 했다. /나주=정종환 기자